



# 주간 통일정세

2009-15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왼팔 절며 등장(4/9,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왼쪽 다리를 가볍게 절긴 했으나 10보가량 걸어 등장하고 양팔을 들어 박수를 침으로써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한 뒤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임. 조선중앙TV가 9일 오후 녹화 방송한 화면에서 김 위원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 주석단 중앙까지 약 10보 걸어 입장
- 한때 마비가 왔던 것으로 알려진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으며 와병 이전의 ‘활보’ 모습은 사라졌으나 양팔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입장, 주석단에 선 채 양팔을 가슴께로 올려 왼손을 밑으로 해 오른손을 움직여 박수를 쳤음. 역시 한때 마비됐던 것으로 알려진 왼손은 다소 통통하게 부은 기가 있으며, 왼손으로는 손가락을 구부려 물건을 잡는 동작을 하지 않았음. 그는 탁자의 서류를 읽을 때도 오른손으로만 넘기고 왼손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은 채 주로 탁자 위에 올려놓은 장면이 많았음.
- 그는 회의 진행중 의자에 앉아 회의장을 둘러보면서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고, 살이 많이 빠진 때문인지 나이(67세)에 비해 늙어 보임.
-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6시부터 약 40분 동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 98.1)’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통해 김 위원장의 올해 1월 현지지도 모습도 동영상으로 공개, 이 영화에서 김 위원장은 1월5일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할 때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3보가량 걷는 장면이 정면에서 잡혔는데, 여기에서도 그는 오른발을 디딜 때는 자연스러운 데 비해 왼쪽 다리는 곧게 편 채 옮겨 걸어 다소 부자연스런 모습을 나타냄.

##### ● 北, 김정일 동영상 공개, 왼팔 이상 뚜렷(4/7, 조선중앙TV)

- 북한이 7일 김정일(68) 국방위원장의 와병 이후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처음 공개,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작년 8월 이전의 모습과 병상에서 일어나 활동을 재개한 11~12월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
- 김 위원장은 활동 재개 초기 왼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왼팔을 활발하게 움직임. 김 위원장은 12월 초 자강도 현지지도 때는 왼손을 약간 흔들며 컴퓨터 자판을 치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했다고 했음.

- 외병 이후 화면은 외병 전과 달리 김 위원장이 활발하게 걸어 이동하는 모습을 일절 비추지 않아 왼쪽 다리가 불편해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 김정일, 지휘소 찾아 발사 전 과정 관람(4/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새벽 “김정일 위원장이 5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광명성2호 발사 전 과정을 관찰했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이날 “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데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우주 공간의 정복과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고 통신은 보도, 이날 시찰엔 로켓 개발을 담당하는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

\* 북한이 로켓 발사 당일 김 위원장의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1998년의 경우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 4일 뒤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2006년에는 무더기 미사일을 쏜 뒤 한 달 동안 은둔했었음.

#### 나. 정치 관련

#### ● 장성택, 3월에 유럽 3국 극비 방문(4/12, 연합)

-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3월 초·중순에 걸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 나라를 비밀리에 순방한 것으로 확인,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2일 “장 부장이 3월초부터 중순 사이에 프랑스 등 3개국을 극비리에 다녀왔다”며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소개
- 그러나 그의 방문기간과 방문국을 볼 때 최근 이탈리아에서 사건이 불거진 김 위원장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을 위한 거래, 지난해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던 김 위원장을 치료한 프랑스 의료진 면담 등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는 특히 이탈리아 방문기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 부부를 만났을 때 함께 타고 대동강과 평양을 둘러봤던 요트가 낡아 이번에 최고급 호화요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은행 계좌를 통해 이탈리아의 요트 구입 중개업자에게 송금했지만 이러한 돈 흐름이 유럽의 금융당국에 추적당해 돈만 날린 채 요트는 구입하지 못했음.
-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유엔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을 위한 물품거래가 외국 정보기관에



별로 들키지 않고 진행되자 긴장이 느슨해지는 바람에 현금 거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은행거래를 했다가 걸린 것”이라고 풀이

- 장 부장은 이탈리아 방문중엔 김일성 주석 때부터 평양을 드나들며 북한 최고위층과 친분을 다져온 이탈리아 사업가 장카를로를 만난 것으로 알려짐. 장카를로는 특히 방북할 때마다 김정일 위원장의 비밀파티에 참석할 정도로 김 위원장 및 장 부장과 절친한 사이며, 장 부장도 이탈리아를 방문할 때마다 그의 집에 초대되는 것으로 전해짐.
- 장 부장은 프랑스 방문에선 프랑스 의료진을 면담해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과 처방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 **김영춘, 혁명의 수뇌부 사수 강조(4/11,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김 위원장 재추대는 “일대 정치적 사변”이며 “전민족적 대경사”라며 전 주민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지적
- 신문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며 방위력을 비롯한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재추대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식의 국가기구 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고 선군정치를 실현할 “영원한 주권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주장
-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촉구, 그는 이날 평양 전승광장에서 열린 김 위원장 재추대 인민무력부 경축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면서 “우리는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수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증흡7연대칭호 쟁취운동’을 더욱 실속있게 벌여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 대오, 오늘의 오증흡7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김기남, 군사적 억제력 계속 강화 주장(4/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10일 미국과 남한의 대북 대결 정책으로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





-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강능수 문화상은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이념 밑에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민족예술 창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나누며 인류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이번 축전은 평양대극장과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 청년중앙회관, 윤이상음악당, 국립연극극장, 중앙노동자회관, 평양교예극장 등에서 진행

### ● 北대의원 중 노동자 비중 30%서 10%로 격감(4/10, 연합)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의 연령이 11기 대의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김국태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이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보고한 대의원 687명의 구성 내용을 11기 때와 비교한 결과 35세 이하의 경우 11기 때는 2.2%였으나 12기에서는 1%로 낮아진 반면 56세 이상은 47.7%에서 50.5%로 2.8% 포인트 많아졌다. 36~55세도 50.1%에서 48.5%로 줄어들었음.
- 특히 여성 대의원의 숫자가 10, 11기에 비해 30여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10, 11기 모두 남녀 비율이 79.9%대 20.1%였지만 12기에선 남성 84.4%, 여성 15.6%로 남성 비중이 많아짐.
- 직업별로 보면, 10, 11기때 각각 31.3%, 33.4%로 3분의 1가량 차지했던 노동자 출신 대의원이 12기때는 10.9%로 격감, 이에 비해 12기 대의원중 군인 비율은 16.9%로 노동자 대의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북한의 ‘선군정치’를 반영, 농업인인 협동농장원의 비율은 10, 11기 모두 9.3%였고 12기에서도 1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학력 면에서 대졸자가 10기 85%, 11기 91.9%, 12기 94.2%로 점차 고학력화하고 있으며, 훈장이나 ‘영웅’ 칭호를 받은 대의원은 10기 63.8%, 11기 48%, 12기 42.4%로 점차 줄어드는 대신 교수나 박사, 과학자, 전문가들이 10기 64.5%, 11기 89.5%에서 12기때는 90.4%를 차지해 증가추세를 나타냈음.

### ● 北, 내각서 민경협 제외(4/10, 연합)

-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의 정운업 전 위원장이 비리혐의로 낙마해 공석임에도 새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이 기구를 내각에서 제외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비춰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라는 평가, 북한이 2008년 대남 경제협력을 통합관리해온 내각 산하 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기는 등 대남 경제기구와 조직을 축소·개편했다는 소문이 제기됐는데, 이번 회의 결과는 그 소문에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재추대, 장성택도 국방위원에 임명(4/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2인자’ 장성택(63) 노동당 행정부장을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 김정일(68)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했고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9일 오후 11시 현재 개헌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김 위원장은 1993년 4월 처음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국방위원장만 ‘4선(選)’을 기록,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안보 부서(보위부·검찰 등)를 총괄하는 장 부장을 포함해 장거리로켓 발사의 주역인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경찰청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부장 승진 추정)을 국방위원에 새로 임명, 이로써 9명이던 국방위 구성원은 13명으로 늘어났음.

●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4/9, 연합)**

- 지난달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가 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
- 조선중앙TV는 평일엔 오후 5시 방송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9일은 오전 9시부터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찬양하는 현지지도 기록영화 등을 방영하는 등 축제분위기를 띄움.
- 노동신문은 9일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안아오게 될 의의깊은 회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1차회의를 “공화국의 변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공화국 정권을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회의”라고 규정
- 신문은 이번 회의는 ▲자주강국 ▲정치군사강국 ▲강성대국 총진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를 강조하면서 “강위력한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받드는 여기에 공화국 정권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이 있다”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사업을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
- 이 신문은 또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조직,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사’ 부문을 2003년 제11기 1차회의 때보다 강조



- **北, 日 로켓부품 수색, 자주권침범 경고(4/8,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8일 '보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낙하물 회수에 나선 것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며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
  - 총참모부는 “피해망상증에 걸려 우리가 위성을 쏘올리기도 전에 ‘위성을 발사’했다는 허위보도를 날려 세상사람들을 웃기고 망신을 당한 일본반동들이 이제는 주제넘게 우리의 위성운반체에서 분리된 부분품을 찾겠다는 그자체가 우주로 날아오르는 위성을 ‘닭쫓던 개 울바자 쳐다보듯’이 보고만 있어야 했던 가공한 처지의 발로(발현)이며 시공창에 처박힌 제놈들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워보려는 가소롭고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고 비아냥
  
- **北, 성과적 발사 환영 군중대회(4/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시민 10여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는 보고에서 ‘광명성 2호’의 발사는 북한의 “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과시한 민족사적 대경사이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이라며 오는 2012년을 앞두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첫 포성”을 울린 것에 이번 발사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대내적 의미를 강조
  - 그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주체공업의 위력과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뚜렷히 실증”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들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최후 돌격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고 주장
  
- **北장성택, 김정일수행 빈도 급증(4/8, 통일부)**
  -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하는 빈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8일 확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수행인물 중 전에 안 나왔는데 빈도가 많이 는 사람이 장성택 부장”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공개활동이 언론에 나온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언론에 공개된 장성택 부장의 김정일 위원장 수행 횟수는 2007년 4차례(10월 이후), 2008년 14차례(10월 이후 9차례), 올해 들어서는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9차례에 달한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
  - 통일부가 올해 1분기 북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을 수행한 인물은 3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일 자주 수행했던 인물은 박남기 당 부장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로 각각 22차례





씩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남기 기획재정 부장은 경제 담당자”라며 “(북한이) 경제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김기남 비서는 노동당 역사연구소 소장으로 사상을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소개

- 그는 “1분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44번했다”면서 “경제가 20번으로 제일 많았고 군이 13번, 외교가 1번, 기타 대의원선거 참가나 공연관람 등이 10번 정도가 된다”고 설명

#### ● 北, 核불능화작업 계속 진행중(4/7,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 북·미간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영변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7일 밝힘. 이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관리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에 계속 머물면서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고 언급
-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8천개 폐연료봉 가운데 지금까지 7천개 이상을 제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최근엔 대북중유지원 지연을 이유로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상당히 늦췄다”고 언급,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금까지 영변 핵시설의 11개 불능화 조치 가운데 8가지를 마쳤으며 폐연료봉 제거 작업,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는 아직 완결되지 않음.
- 북한은 불능화 작업 초기엔 하루 80개의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당초 6자회담에서 제공하기로 한 대북중유 100만t 상당의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폐연료봉 제거속도를 늦춰 최근엔 주당 15개의 폐연료봉만을 제거하는 등 ‘지연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北, 5일 발사 앞서 美·중·러 측에는 통보(4/7, 연합)

- 북한이 5일 장거리로켓을 쏘기에 앞서 미국·중국·러시아 등에 발사 사실을 미리 통보했던 것으로 6일 알려짐.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보고, 한 참석 의원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날(5일), 사전에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에 ‘대략 몇 시 이후에 발사하겠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이는 북한이 IMO(국제해사기구) 등에 예고한 발사 시점(4월 4~8일)보다 훨씬 구체적인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이 의원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발사 시점에 대해 통보 받은 게 없으며, 미국을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다. 경제 관련

### ● 北, 아리랑 관람료 두배가량 인상(4/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의 올해 관람료에 대한 대폭 인상방침을 해외의 북한전문 여행사들에 통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RFA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고려관광'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북한 당국자에게서 오는 8월 재개되는 아리랑 공연의 관람료가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소개, 북한이 통보한 올해 관람료는 좌석에 따라 80~300유로(미화 약 100~400달러)로 2008년 40~240유로에 비해 대폭 올랐으며, 가장 싼 좌석의 경우 가격이 40유로에서 80유로로 지난해의 2배로 상승
- 카커럴 대표는 "북한이 이번에 처음 관람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공연 준비에 드는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나온 조치로 안다"고 밝히고 호텔 숙박비나 고려항공의 항공요금 등 다른 비용은 지난해와 같다고 언급
- 한편, 북한이 지난해 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해 선보였던 집단체조 '조국이여 번영하라'는 올해 공연되지 않으며, '강성대국' 달성 시한으로 잡고 있는 2012년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새로운 대규모 집단체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

### ● 2009년 北예산 34억5천만 달러로 추정(4/10, 연합)

-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밝힌 올해 예산수입 계획이 작년도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5.2% 증액됐다고 밝혀 북한돈 4천826억원(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가량으로 추산됨.
- 북한의 신임 김원수 재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예산결산과 올해 예산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수입계획이 지난해보다 5.2%, 지출계획이 7% 늘어나게 된다고 밝힘. 또 2008년 예산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6% 더 많았으며, 지출은 99.9%가 집행됐다고 언급, 북한의 지난해 예산은 4천515억원으로 추정됨.
- 김 재정상은 세원에 대해, 중국의 기업소득세와 유사한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을 5.8% 늘려 편성하고 협동단체이득금 수입은 3.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은 6.1%, 부동산사용료 수입은 3.6%, 사회보험료 수입은 1.6% 늘려 잡음.
- 지출계획의 경우, 작년에 비해 도시경영부문 지출을 11.5%로 대폭 늘렸고, '인민경제 선행부문(금속, 석탄, 철도운수 등)'에 8.7%, 교육부문 8.2%, 보건부문 및 과학기술 부문 각 8%, 농업부문 6.9%, 체육부문 5.8%, 경공업부문 5.6%, 문화예술부문 3.2% 늘림.
- 김 재정상은 올해 예산 편성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국



방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원천을 최대한 찾아내고 비생산적 지출을 극력 줄이는 원칙에서 현실적이며 동원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 북한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예산의 15.8%를 책정, 북한돈 762억5천만원(5억4천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北이동통신, 3개월만에 2만명 가입(4/6, 조선신보)**

- 북한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휴대전화 서비스에 3개월만에 2만명이 가입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간 합작사인 체오합작회사의 이동통신은 “음성(통화)과 단문통보문(SMS)”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평양시 전 지역과 평양-향산 사이 고속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소개
- 체오사의 윤광춘(40)씨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 이 회사는 올해 안으로 통신망을 각 도 소재지와 지방 주요도시, 고속도로 및 철도 연선(접경)지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 시기로 내건 2012년까지 “인민들이 사는 모든 곳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는 설명
- 가입 절차는 ‘봉사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비용(단말기 가격+가입비 50유로)과 함께 제출하면 누구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현재 판매되는 단말기의 가격은 110~240유로이며 촬영 기능을 갖춘 것도 있음.
- 통화요금은 전용카드를 구입해 결제하며, 카드는 이용자의 통화 빈도에 따라 A(북한 돈 850원), B(1천700원), C(2천500원)의 3종류가 있음. B와 C 카드에는 각각 125분, 400분의 무료 통화시간이 제공됨. 봉사소는 지난해 12월 개통 당시엔 보통강구역의 국제통신센터 안 한 곳에만 설치됐지만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중순부터 중구역에도 임시판매소를 설치, 현재 평양 시내 2곳에 설치

라. 군사 관련

● **노동신문, 광명성2호, 저고도·경사궤도 위성 주장(4/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자 ‘인공지구위성의 종류와 그 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실어 발사한 ‘광명성2호’가 저고도·경사궤도 위성이라고 주장
- 신문은 “저고도 위성은 높이가 수백m로부터 수천m이고 중고도 위성은 높이가 약 5천~2만m, 고고도 위성은 2만m 이상되는 위성”이라며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2호’는 저고도 위성에 속한다”고 소개
- 신문은 또 “위성궤도 경사각이란 지구 적도면과 위성 궤도면 사이



의 각을 말한다”며 “경사궤도 위성은 궤도경사각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위성”인데 “광명성 2호는 경사궤도 위성에 속한다”고 설명

- 신문은 또 인공위성의 무게에 따른 분류도 소개, 100kg이하의 극소형 위성, 100kg~1t의 소형위성, 1t이상의 대형위성으로 구분했으나 ‘광명성 2호’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신문은 용도에 따라 실용위성과 과학위성, 군용위성으로 구분하고 “실용위성은 응용분야가 넓은 위성으로 여기에는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지구자원탐사위성, 해양관측위성 등이 있다”며 “광명성2호는 앞으로 실용통신 위성발사와 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된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소개

#### ● 北로켓과학자들, 위성 정상 가동 주장(4/8, 조선중앙TV)

- 북한이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2호’ 개발 및 발사에 참여했던 북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과학자들은 8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현재도 “위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신호와 측정자료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 조선중앙TV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관제지휘소 부소장인 장태섭 박사는 “광명성2호는 이미 우리가 세상에 알린 것처럼 시험통신위성”이라며 “위성 안에는 필요한 측정기재들과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다. 지금 그 기재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주장
- 그는 “위성이 운반로켓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위성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울려나왔다”며 지난 10년간 김정일 위원장의 “우주정복구상”을 받들어 투쟁한 결과라고 역설
- 최광일 실장도 “광명성2호 위성은 자기궤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며 “지금 위성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 박월형 박사는 “타원궤도를 따라 우리 위성은 돌고 있다”며 기존 북한의 발표대로 위성의 궤도경사각은 40.6도이며 주기는 104분12초라고 언급
- 이들 과학자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사 당일 지휘소에 들러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본 뒤 “동무들이 이번에 큰일을 했다. 오늘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고 “우주의 정복과 그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언

#### ● 北위성관제소, 위치는 평양 룡성구역(4/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평양시 룡성구역 제2자연과학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7일 “북한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제2자연과학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2자연과학원은 평양시 룡성구역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힘. 앞서 6일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평양에 있음을 시사

- 제2자연과학원은 로켓, 미사일과 같은 유도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1국, 상용무기(재래식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2국 등과 공학연구소를 비롯한 30여 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이중 중추인 공학연구소가 노동1호와 대포동1호를 개발했고 이후 대포동 2호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 과학원은 1964년 6월 당시 민족보위성(현 인민무력부) 산하 국방과학원으로 출범했다가 1970년대 초 군수생산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생겨 이 위원회 산하로 들어가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백세봉)에서 독립돼 노동당 군수공업부에 직속되었음. 북한은 이 과학원에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연구 개발하면 제2경제위원회가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
-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 연구·개발 ▲각종 포의 자행(自行) 자동화 실현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음.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기지도 이 과학원 산하로 ‘농업시험소’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제2자연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외에 분강핵연구소(영변원자력연구단지)도 산하에 둔 핵문제를 다루고 있음.

#### ● 北, 발사 9분2초만에 위성궤도 진입 주장(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9분2초 동안 날아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발표, 하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발사시각도 10분이나 차이가 나고, 위성의 궤도 진입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긴급 보도를 통해 “은하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2초 만인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며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 거리 1426km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12초”라고 발표

#### 마. 사회·문화 관련

##### ● 북한 우주항공 인재 양성 체계(4/9, 조선신보)

- 북한이 5일 “시험통신위성”이라는 ‘광명성 2호’ 발사를 전후해 자신들의 우주개발·이용계획을 강조함에 따라 북한의 우주항공 과학 수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관



런 기구·제도·시설이 새로 공개, 조선신보는 9일 북한의 김책공업 종합대학에 ‘우주항공공학과’가 있다고 소개

- 신문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와 잇닿아 있는 두뇌집단”이라고 설명한 이 학과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병설된 단과대학인 기계과학기술대학 소속으로, 북한 유일의 “우주공학 인재 양성 전문학과”이며 “첨단과학의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따라 앞서기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1990년대 중엽 개설
- 이 학과의 김상윤(74) 교수는 이 학과가 김책공대 재료공학부나 기계과학대학의 분사식학과 등 다른 학부, 학과들과 긴밀히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엔 특히 티탄합금, 몰리부덴 등 “내열성 합금재료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
- 이 학과 졸업생들은 “과학원의 우주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들, 항공분야 기술기관들과 공업부문 생산단위들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소개, 우주항공공학과 학생들은 수재중에서도 “선발된 수재”들임. 평양시와 각 도에 있는 중고교 과정의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 외에 김책공대에도 학년마다 수재반이 따로 있는데, 이 수재반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학생들로 “공학수재반”을 별도로 구성,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
- 수재반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부, 학과를 선택하지만 “공학수재반” 학생들은 “대학측에서 전공과목이 제시”되고 이들은 4년간의 대학과정을 마치면 박사원에서 계속 배우게 된다고 조선신보는 설명
- 한편 지난 2월 발사 계획을 공식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 ‘슬그머니’ 존재를 내비쳤다가 이번에 북한 당국을 대표해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주체로 나섰다. 북한은 19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 발사 당일은 물론 그후에도 이 기구의 존재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음.

#### ● 北, 다양한 모자보건 활동(4/6,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가 올해 산간·농촌 순회 봉사와 지역별 선전물 제작 등 다양한 ‘재생산건강(모자보건) 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6일 소개
- 신문은 협회 서현철 서기장의 말을 인용, 협회의 “모든 봉사단위들이 가족계획, 부인과질병의 검사·치료, 신생아 건강, 임신·불임 상담, 초음파 검사, 일반의료, 실험검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특히 7개의 이동봉사대가 교통이 좋지 않은 산간지대와 농촌의 주민들을 위주로 분기에 60~7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모자보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산건강의 다양화를 위해 봉사 가짓수와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이라고 밝힘.
- 협회는 지난해 4만3천여 명에게 산과 및 소아과, 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일반 의료와 상담 활동을 했다고 신문은 소개



## 2. 대외정세

### 가. 로켓발사 관련 유엔 대응

#### ● 안보리 의장 성명에 北제재 강화 적시(4/13,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12일 내놓은 의장성명 초안의 내용은 “예상보다도 높은 수위”(정부 당국자)를 담고 있음. 형식상으로는 ‘결의문’보다 낮은 격이지만, 중국·러시아까지 동의한 의장성명에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당초 한·미·일의 목표치에 근접한 결과물
-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인 ‘규탄’(condemn)을 사용한 것은 중국·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줌.
- 또 의장성명은 로켓 발사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명시하며 “북한이 어떤 형태의 추가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 이는 곧 북한의 주장대로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이를 ‘탄도미사일 관련 실험’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로켓 발사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
- 의장성명은 새로운 제재를 담진 않았으나 1718호에 지정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3가지 대북 제재 조치 중 지금까지 사실상 사문화상태였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의 구체적 타깃 리스트(대상 목록)를 작성토록 했음. 다만 1718호에 ‘개인과 단체’로 돼 있는 대상 목록 중 ‘개인’은 빠졌음.
- 의장성명이 채택되더라도 타깃 리스트 선정을 두고 다시 한번 마찰을 빚을 소지가 다분, 대상 목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됐다 해도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를 정교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이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거미줄처럼 얽여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안보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경우 당분간 6자회담은 물론, 북한과의 어떤 협의도 진행되기 어려운 냉각기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안보리 주요국 對北 의장성명(4/12, 연합)

- 북한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6개국(5개 상임이사국+일본)이 11일(현지시간)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하는데 합의,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낮 유엔본부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존 소여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시



간 가까운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장 성명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의장성명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

- 그동안 결의안 채택을 주장해왔던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대사도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혀 일본이 의장성명을 수용했음을 설명
- 안보리는 주요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으로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합의함으로써 12일 오후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

● 北, 유엔에 ‘인공위성’ 미통보(4/10, 연합; 자유아시아방송; 로이터 통신)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의 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관련 통보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도 유엔 외기권사무국(UN-OOCA)이 북한으로부터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른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힘.
- 앞서 북한은 3월 10일 외기권조약 및 우주물체등록협약 가입 이후 뉴욕과 빈의 북한 유엔대표부를 통해 가입국의 의무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외기권사무국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몽타스 대변인은 언급
- 북한은 로켓발사에 앞서 준비작업의 하나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예정일과 시간 등 관련자료들을 지난달 11일 통보했지만, 인공위성과 관련한 우주 관련 조약에 따른 사후통보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임.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일축
- 로이터 통신은 유엔이 인공위성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7일 북한의 인공위성 등록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등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도

\* 외기권조약은 제11조에서 ‘당사국은 외기권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데 동의한다 (agree to)’고 규정하고 있고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제4조에서 ‘발사국, 발사일시, 발사지역, 발사위치, 기본 궤도 요소,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성 발사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고, 국가들은 보통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서 한참이 지난 사후에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라 유엔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 주요 6개국 ‘北로켓 협의’ 재개(4/10, 연합)

- 이틀간 공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로켓 대응방안 협의가 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재개, 한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일본이 참여하는 6개국 비공식 협의가 유엔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힘.

● 국제통신기구, 北 위성·전송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4/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북한의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해 노래 등을 전송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일축
- 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은 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듣고 있다는 그 방송을 누가 감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못 들었을 것이고 우리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 그는 북한이 인공위성의 전송에 이용한다는 주파수 470MHz를 ITU가 배정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배정하지 않은 주파수로 “다른 위성의 전파를 방해하면 회원국의 신고가 바로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북한 위성에 관한 회원국들의 신고나 보고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힘.
- 이어 그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로켓이 저궤도 위성(low orbit satellite)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궤도 위성은 정상적인 전송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성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지구로 보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

● 안보리 회의 소집, 결의 1718호 위반(4/5,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후 3시(서울시각 6일 오전 4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재확인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
-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Obama) 미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provocative act)’로 규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을 자초했다”고 언급



## 나. 북·미 관계

### ● 美, 분명한 대북 메시지 강조(4/13, 연합)

- 미국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합의는 국제사회가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의장성명 초안에 합의한 직후 “(의장성명 내용이) 매우 강하다”면서 “국제법 위반이 별 탈 없이 지나가지 않고 결과를 낳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또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에 위배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성명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보강하고 사실상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 미국 주요 언론은 12일 유엔 안보리에서의 의장성명 채택 합의에 대해 “타협”이라고 평가

### ● 라이스 美대사, 美, 강력한 대북제재 원치 않아(4/6, CNN, CBS 방송)

- 미국은 유엔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6일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이날 미 CNN,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도 이 같은 행동을 벌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 라이스 대사는 “북한을 6자 회담이라는 건설적인 협의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적 노력과 압력을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논의의 목표는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

### ● 北역류 여기자 신속석방 기대(4/5, ABC방송)

-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5일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이 재판에 회부될 어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라이스 대사는 A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의 안전하고 신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석방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언급
- 라이스 대사는 또 북한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스웨덴대사관과 협력해 미 행정부가 “그들의 안전과 신속한 석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





상원의원의 지적에 대한 중국의 논평을 요구받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압력과 제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 장 대변인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단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 6자회담 추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라. 북·러 관계

### ● 러, 北 제재하면 6자회담 심한 손상(4/9,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 방안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9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몇몇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현존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1718호도 충분하다”라고 밝힘.
- 그는 “더 엄한 제재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6자회담에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더 분노하게 할 것이며 이는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가정 적절한 대응은 안보리 의장 성명일 것”이라며 “우리는 그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임.
- 그는 특히 북한의 로켓 프로그램 중지를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위성 발사를 허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북한 로켓 발사에 평범하지 않은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그러한 제안에 관심을 둘 것이며 북한과 모든 관련국이 동의한다면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 ● 러, 北 위성 궤도 진입 실패(4/6, 인테르팍스 통신)

- 북한이 5일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6일 러시아 민영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이 관계자는 “우리의 우주 감시 시스템이 북한 위성의 우주 궤도 진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위성은 거기(궤도)에 없다”고 설명
- 미군 북부사령부(USNORTHCOM)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음.



마. 북·일 관계

● **日, 대북 수출 전면금지 보류(4/9, 연합)**

- 일본 정부는 9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의 하나로 검토했던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일단 보류, 이는 일본의 대북 수출액이 연간 수익엔 정도로 적은데다 제재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 기인
- 대신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액 보고 대상을 현재의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북한 방문자가 소지하는 현금의 신고 액수 기준을 현재의 100만엔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현행 대북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할 계획, 송금액 규제 등은 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함. 다만, 대북 송금 규제의 경우도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바. 기타외교 관계

● **베트남, 北 식량생산 돕겠다(4/9, 베트남 외교부; 4/10, 연합)**

- 베트남은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9일 밝힘. 르 등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광업과 식량 생산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
- 이에 앞서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이 자국을 방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힘.
- 한편, 공산주의 국가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인 베트남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고 언급

● **나토, 北 로켓발사는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위(4/9, 연합)**

- 나토는 8일 회원국 대사급이 참석한 가운데 북대서양위원회(NAC) 회의를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위”로 규정,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 성명은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할 걸음 더 내디딘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성명은 또 “북한 당국의 이처럼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위는 지역(동북아시아)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 틀 속에 대화를 복원하라”라고 촉구, 나토는 이와 함께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



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연관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라”라고 압박

\* 나토는 이에 앞서 4월 5일 야프 데 후프 스페페르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했으며 4일 ‘스트라스부르-켈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시한 바 있음.

● EU집행위, 北 고려항공, 계속 취항금지(4/8, 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유럽연합(EU) 취항금지 조치가 다시 연장, 고려항공은 8일 EU 집행위원회가 수정, 발표한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에서 제외되지 못했음. EU 집행위는 산하 항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차례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를 수정, 발표
- EU 집행위 관계자는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전적으로 항공안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뿐 그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이슈 등은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설명

● 이란, 北로켓발사 옹호, 對北협력설 부인(4/6, AP, AFP통신)

- 이란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모든 나라는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며 북의 로켓 발사 행위를 옹호했다고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6일 보도
- 하산 카시카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를 개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우리가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듯이 다른 나라 역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
- 카시카비 대변인은 이번 로켓 발사를 위해 북한과 이란이 긴밀히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 그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를 뿐더러 독립적이라고 강조

3. 대남정세

● 北, 개성근로자 올들어 2천여 명 신규공급(4/9, 통일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천273명의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신규로 공급됐다”고 소개, 신규 공급된 인력은 대부분 공단 내 생산업체들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현재 건설 근로자를 포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총 3만9천여 명에 달함.
- 올 들어 2천명 이상 추가 투입됐음에도 작년 12월말 3만8천931명



이었던 북측 근로자의 순증 폭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은 작년 말 이후 공장을 신축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관계로 건설 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소개



### 〈첨부〉 北 김정일 3기체제 주요간부 명단

- 북한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부 등 각 기관의 인사를 단행

다음은 기관별 명단임.

####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유임)  
 제1부위원장: 조명록(유임)  
 부위원장: 김영춘(유임), 리용무(유임), 오극렬(2월 임명)  
 위원: 전병호(유임), 김일철(유임), 백세봉(유임),  
 장성택(신임), 주상성(신임), 우동측(신임),  
 주구창(신임), 김정각(신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유임)  
 부위원장: 양형섭(유임), 김영대(유임)  
 명예부위원장: 김영주(유임)  
 서기장: 최영림(유임)  
 위원: 류미영(유임), 강영섭(유임), 심상진(신임),  
 홍석형(유임), 김양건(신임), 리용철(유임),  
 김병팔(신임), 강창욱(신임), 로성실(신임),  
 변영립(유임), 태형철(유임)

#### <내각>

총리: 김영일(유임)  
 부총리: 광범기(유임), 태종수(유임), 로두철(유임),  
 오수용(신임)  
 외무상: 박의춘(유임)  
 인민보안상: 주상성(유임)  
 국가계획위원장: 로두철(신임)  
 전력공업상: 허택(유임)  
 석탄공업상: 김형식(유임)  
 채취공업상: 강민철(유임)  
 원유공업상: 김희영(유임)  
 금속공업상: 김태봉(유임)  
 기계공업상: 조병주(유임)  
 전자공업상: 한광복(신임)  
 건설건설공업상: 동정호(유임)  
 철도상: 전길수(유임)  
 육해운상: 라동희(유임)  
 농업상: 김창식(유임)  
 화학공업상: 리무영(유임)  
 경공업상: 리주오(유임)





무역상: 리용남(유임)  
 임업상: 김광영(유임)  
 수산상: 박태원(유임)  
 도시경영상: 황학원(신임)  
 국토환경보호상: 박송남(유임)  
 국가건설감독상: 배달준(유임)  
 상업상: 김봉철(유임)  
 수매양정상: 문응조(신임)  
 교육상: 김용진(유임)  
 체신상: 류영섭(유임)  
 문화상: 강능수(유임)  
 재정상: 김완수(유임)  
 노동상: 정영수(유임)  
 보건상: 최창식(유임)  
 국가검열상: 김의순(유임)  
 국가과학원장: 변영립(유임)  
 체육지도위원장: 박학선(유임)  
 중앙은행 총재: 리광곤(유임)  
 중앙통계국장: 김창수(유임)  
 내각 사무국장: 김영호(유임)  
 수도건설부장: 김응관(신설·신임)

<중앙검찰소장> : 리길송(유임)

<중앙재판소장> : 김병률(유임)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유임)

부의장: 김완수(신임), 홍선옥(신임)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국태(신임)

위원: 김원홍(신임), 지영춘(신임), 박도춘(신임),  
김시학(유임), 김영호(신임), 우두태(유임)

<법제위원회>

위원장: 주상성(신임)

위원: 리길송(유임), 김병률(유임), 김평해(유임),  
성자립(신임), 박관오(유임), 김영일(신임)

<예산위원회>

위원장: 박남기(유임)

위원: 리철봉(신임), 홍서현(유임), 계영삼(신임),  
문명학(유임) 김명환(신임), 조혜숙(유임)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北로켓

##### ● 안보리, 조만간 北로켓 의장성명 채택(4/1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이르면 현지시간 11일(한국시간 12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안을 마무리짓고 내주초 표결을 통해 이를 공식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 1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대한 협의를 속개함. 이날 협의에서 6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회원국들에게 기존 유엔 결의 1718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 내용을 집중조율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를 경우 내주초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 정식으로 이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
-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조치에 대한 협의를 속개할 것”이라면서 “일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정부 대표가 만나 협의를 한 뒤 진전이 있으면 전체회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 北신문 “광명성2호, 저고도·경사궤도 위성”(4/1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실어 발사한 ‘광명성2호’가 저고도·경사궤도 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10일자 ‘인공지구위성의 종류와 그 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고도 위성은 높이가 수백m로부터 수천m이고 중고도 위성은 높이가 약 5천~2만m, 고고도 위성은 2만m 이상되는 위성”이라며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2호’는 저고도 위성에 속한다”고 소개했음.
- 신문은 또 “위성궤도 경사각이란 지구 적도면과 위성 궤도면 사이의 각을 말한다”며 “경사궤도 위성은 궤도경사각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위성”인데 “광명성 2호는 경사궤도 위성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은 “극궤도 위성은 위성궤도면이 적도면과 대체로 수직이고 지구의 극주위로 돌아가는 위성으로, 지구자원 탐사위성, 정찰위성 등이 속한다”고 말하고 “적도궤도 위성은 궤도경사각이 0도인 위성으로 적도궤도 상공을 돌아가는 위성으로 정지통신위성이 속한다”고 말했다.



- 신문은 또 인공위성의 무게에 따른 분류도 소개, 100kg이하의 극소형 위성, 100kg~1t의 소형위성, 1t이상의 대형위성으로 구분했으나 ‘광명성 2호’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신문은 용도에 따라 실용위성과 과학위성, 군용위성으로 구분하고 “실용위성은 응용분야가 넓은 위성으로 여기에는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지구자원탐사위성, 해양관측위성 등이 있다”며 “광명성2호는 앞으로 실용통신 위성발사와 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된 시험통신위성”이라고 덧붙였음.

#### ● <러시아, 안보리 의장성명 관철에 고무>(4/11)

-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임. 중국과 함께 고수해 온 ‘제재 반대’ 주장이 안보리 주요국 회의에서 관철됐기 때문.
- 미국,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하지만 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결국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 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 개발에 대한 주권국의 권리라는 점을 들어 위배가 아니라고 맞서왔음.
-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 후 각국이 우려와 비난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러시아는 군사 전문가들의 정확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공식적 입장을 미뤘음.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음.

#### ● “北로켓 추락전 우주 진입”<美우주전문지>(4/11)

-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로켓은 일시적이지만 추락하기 직전 우주에 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이 초기에 관측한 것보다 최대 800km 까지 더 멀리 날아갔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이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보유와 미사일 기술 확산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란과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항공우주 전문지인 ‘스페이스플라이트 나우’는 11일 인터넷 판에 게재한 ‘북한로켓 초기 생각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켓이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해 대기권으로 추락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우주에 진입했다”고 밝혔음.
- 이 전문지는 또 “북한의 지난 5일 대포동 2호 발사실험 분석결과, 발사체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 마일(700~800km) 멀리 날아갔고 전보다 훨씬 개량된 조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지는 레이더 추적과 미국방공사령부의 지원프로그램인 미사일 경보위성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



했음.

- 북한의 로켓이 발사대에서 1천900마일(3천58km) 날아갔다는 미국과 일본의 앞선 발표와는 달리 2천390마일(3천846km)까지 날아갔고 발사체가 이륙한 직후 주변에서 나온 연기는 로켓이 고도제어장치를 갖췄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임.
- 로켓의 우주 정상궤도 실패와 관련, 이 잡지는 “발사체의 3단계 고체추진연료가 적절히 분리되지 않아 일어났다”면서 “2단계 추진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우주로 향해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분리 발사되게 돼 있는 3단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잡지는 “북한의 이번 로켓은 지하격납고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의 국방부도 이제는 2단계가 초기단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며 계획했던 대로 작동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발사체가 위험 지역에 훨씬 미치지 않았다는 미국과 일본 군당국의 종전 발표와는 달리 하와이를 향해 태평양 상에서 최대 500마일(805km)이나 더 날아갔고 2단계는 북한이 선박과 항공기들에 대해 벗어날 것을 경고했던 위험지역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임.

#### ● 매케인 “北로켓, MD 필요성 보여줘”(4/10)

-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10일 주장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만큼 MD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 매케인 의원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로켓 발사, 경제 문제, 주일 미군부대 이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당장은 각국이 핵무기 실험을 하는지 더욱 잘 감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케인 의원은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 애미 클로부차 상원의원 등과 함께 베트남과 홍콩,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했음.

#### ● “美, 北로켓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제안”(4/10)

-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채택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9일(미국 현지시간) 밝힘. 이들은 미국이 이날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한 협의를 재개했을 때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설명함.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안보리에서 구속력 있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던 일본의 의사를 사실상 좌절시킨 것으로 풀이됨. 외교 소식통들도 안보리가 의장 성명 수준에서 북한 로켓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종결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견해를 보



여쭙.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절망적”이라고 말함.

- 일본은 당초 미국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대북 결의안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시도함.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수준의 결의안 채택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는데, 결국 그보다도 더 낮은 수위의 의장 성명 채택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 중국은 이번 안보리 협의에서 의장 성명보다도 더 낮은 대응 수위인 언론 발표문 채택을 주장해 옴. 소식통들은 중국이 제시한 의장 성명 초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의심되는 행동에 대한 우려 표명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단순한 재확인 수준이 담겨 있다고 밝힘.

#### ● 日정부, 北로켓 ‘미사일’로 표기 변경(4/10)

- 일본 정부는 10일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로켓의 공식 표기를 그동안 사용하던 ‘비상체(飛翔體)’에서 ‘미사일’로 변경함.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미사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힘.
- 그는 변경 이유에 대해 “북한이 쏘았다는 인공위성이 궤도를 선회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사의 본질이 (탄도미사일 관련 계획의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결의도 있고 해서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하기로 했다”고 말함.
-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발사 행동과 시간, 속도 등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위성 또는 미사일 인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그동안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에 대해 줄곧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부는 이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비상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옴.

#### ● 北, 유엔에 ‘인공위성’ 미통보(4/10)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의 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관련 통보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도 유엔 외기권사무국(UN-OOCA)이 북한으로부터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른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힘.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외기권조약 및 우주물체등록협약 가입 이후 뉴욕과 빈의 북한 유엔대표부를 통해 가입국의 의무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외기권사무국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몽타스 대변인은 전함. 이 조약과 협약은 가입국이 발사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은 로켓발사에 앞서 준비작업의 하나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예정일과 시간 등 관련자료들을 지난달 11일 통보했지만, 인공위성과 관련한 우주 관련 조약에 따른 사후통보 절차는 밝지 않고 있는 것임.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해 데이터와 혁명가 등을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북한의 로켓에서 궤도에 진입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일축함. 로이터 통신은 유엔이 인공위성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7일 북한의 인공위성 등록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등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도.
- 외기권조약은 제11조에서 ‘당사국은 외기권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데 동의한다(agree to)’고 규정하고 있고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제4조에서 ‘발사국, 발사일시, 발사지역, 발사위치, 기본 궤도 요소,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北로켓 2-3단계 추진체 분리” <교도> (4/10)

-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로켓의 3단계 추진체가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2단 추진체로부터 확실히 분리가 됐으며, 함께 추락하지는 않았다고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9일 전함. 소식통들은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3단계 추진체는 북한 함경북도의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3천km 이상 떨어진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이들은 또 북한의 이번 로켓이 발사 후 약 500km 고도까지 도달했다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방위성과 미군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상세한 비행경로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함. 당초 일본 정부는 2단계와 3단계 추진체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미군은 3단계 추진체가 2단계와 분리돼 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들은 미군이 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에서 앞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함. 하지만 이들 소식통은 3단계 추진체의 정확한 낙하지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2단계 추진체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만 밝힘.



#### ● 러 “北 제재하면 6자회담 심한 손상”(4/9)

-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 방안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9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몇몇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현존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1718호도 충분하다”라고 밝힘.
- 그는 “더 엄한 제재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6자회담에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더 분노하게 할 것이며 이는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그는 “가정 적절한 대응은 안보리 의장 성명일 것”이라며 “우리는 그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임.

#### ● 中 “北제재는 비핵화에 도움 안돼”(4/9)

-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압력과 제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지적에 대한 중국의 논평을 요구받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압력과 제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 장 대변인의 이 발언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유엔 1718호 결의안과 관련해 “안보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임. 장 대변인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단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 6자회담 추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6자회담이 지난 6년간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화해란 새로운 국면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 신중함을 견지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 나토 “北 로켓발사는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위”(4/9)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거듭 비난함. 나토는 8일 회원국 대사급이 참석한 가운데 북대서양위원회(NAC) 회의를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위”로 규정,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함.
- 성명은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할 걸음 더 내디딘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성명은 또 “북한 당국의 이처럼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위는 지역(동북아시아)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 틀 속에 대화를 복원하라”라고 촉구함.
- 나토는 이와 함께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연관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라”라고 압박함.
- 한편, 나토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야프 데 후프 스페페르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했으며 4일 ‘스트라스부르-켈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시한 바 있음.

### ● 그라헴 美상원의원 “北에 강력 입장 필요”(4/9)

- 베트남과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의 린제이 그라헴 상원의원(공화당)이 7일 강조함. 베트남을 방문한 그라헴 의원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5일)에 대해 북한측의 주장과 달리 로켓이 궤도 진입하지 못했으며 실패한 탄도미사일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
- 같은 당 소속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과 함께 중국과 일본 방문 길에 베트남에 들른 그는 “우리는 유엔안보리에 들어간 베트남이 중국 및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함.
- 베트남은 지난 5일 레 중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신중한 대응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임.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안보리 순회외장국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 국제통신기구 “北 위성·전송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4/9)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북한의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해 노래 등을 전송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





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일축함. 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은 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듣고 있다는 그 방송을 누가 감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못 들었을 것이고 우리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임.

- 그는 “전송과 통신이 가능한 위성은 지구궤도에 진입한 뒤 정해진 공간에 정착해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이 회전하는 정지궤도 위성(geostationary satellite)이지만 북한의 ‘광명성 2호’는 이런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함. 그는 북한이 인공위성의 전송에 이용한다는 주파수 470MHz를 ITU가 배정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배정하지 않은 주파수로 “다른 위성의 전파를 방해하면 회원국의 신고가 바로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북한 위성에 관한 회원국들의 신고나 보고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힘.

#### ● 빅터 차 “美, 포스트 김정일 한·중과 논의해야”(4/9)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민주화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그는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이나 측근 그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북한의 핵야욕은 진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이런 언급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 필요성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됨.
-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그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처벌하는 압력을 넣고,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적인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이후의 북한 지도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중국 및 한국과 조용하지만 진지한 대화에 착수토록 관련 기관에 지시해야 한다”고 말함. 또 “북한의 잠재적인 새 지도부와와의 접촉을 시도해 건설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함.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이행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비롯한 경제제재를 다시 가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용했던 이런 종류의 제재들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시리아의 핵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폭로를 명분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이밖에 “모든 북한의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방안을 제공해야 하고, 식량과 의료, 교육, 에너지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촉발된 북한 권력층 내의 소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 러' 외무 "북한 제재 역효과 날 것"(4/8)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분명히 우려할 사항이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역효과가 날 뿐"이라면서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함.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은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이뤄진 모든 결정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함. 전날도 라브로프 장관은 대북 제재에 있어 국제사회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 김정남 "국제사회 반응 지켜본다"<日TBS>(4/8)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정남(正男)씨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발사에 대해 상당히 이전부터 이야기했었다"며 "나는 발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TBS가 8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마카오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또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마카오에 있어서 모른다"며 "북한 언론은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해외 언론은 실패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또 그는 이번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각국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함.
- 아울러 정남씨는 자신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만약 내가 후계자라면 나와 마카오에서 만날 수 있었겠느냐"라며 "나는 그(김정일)의 아들일 뿐임.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힐 위치)은 아니다"고 말함. 북한은 9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정남씨는 가장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잠시 북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 "美, 北로켓발사 대응 혼선"<WP>(4/8)

-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이 강경과 무시하는 대응 기조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7일자 사설과 분석 기사를 통해 비판함. 포스트는 이날 '대북(對北) 혼란, 평양의 도발에 대한 미국 대응 또다시 흐리멍덩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관성 없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



- 표의 대응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지적함.
- 체코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일요일 오전 4시30분에 측근들의 보고를 받고 일어나 북한의 대륙 간 미사일 발사를 비상상황 처럼 대처하면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위반행위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엄중히 선언하고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게 유엔에서 즉각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함.
  - 하지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있기 이틀 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을 다룰 때 압력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미사일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미 행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 정권이 항상 간절하게 희망해온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평양에 가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포스트는 사설에서 지적함.
  - 포스트는 또 이날 10면 분석 기사에서도 “미국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혼란스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의 반응과 군과 정보 당국자의 반응 대비시킴.
  - 워싱턴과 유엔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로켓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군과 정보소식통들은 로켓발사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라는 주장을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임.
  - 국무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에서 “강력하고 조율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또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발사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규정했고 라이스 대사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했음.

#### ● “北 핵확산 저지 위해 中압력 중요” <FP>(4/8)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하버드대 벨퍼연구소의 윌리엄 토비 연구원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7일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FP) 인터넷판에 공동기고문을 싣고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위협하고도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함.
- 이들은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시리아 알-키바르 비밀원자로를 예를 들면서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이 더욱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북한의 식량과 연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

-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의 핵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로 핵확산에 나설 경우 중국의 안보 목표에도 어긋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적 노력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차선이며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 행사라고 거듭 강조함.
-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 러'외무 “대북 제재 신중해야”(4/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 제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7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기쁘게 하나도 없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각국은 성급한 결론은 피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로켓 발사에 대한 기술적 특징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우리의 우려를 표현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 없는 것은 한반도 북핵문제에서 서로 간의 불신을 키울 뿐”이라면서 “러시아는 하루빨리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는 아직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 검토 작업을 거친 후 로켓의 성격 규명과 제재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짐.

#### ● 中 “유엔 안보리 北제재에 신중해야”(4/7)

-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엔 1718호 결의안과 관련해 안보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로켓과 미사일 기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있고 위성 발사와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면서 “이 문제는 각국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 만큼 우리는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



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장 대변인은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돼야 하고 6자회담 추진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다는 발표와 유관 국가들의 반응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혀 성공이나 실패냐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그는 역시 발사체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북한 및 유관 국가의 발표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을 되풀이함. 장 대변인은 “이어 현 정세 하에서 관련국들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히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희망한다”고 말함.

#### ● “北, 핵불능화작업 계속 진행중”(4/7)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 북·미간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영변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7일 밝힘. 이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관리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에 계속 머물면서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영변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복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이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불능화 중단 및 불능화한 핵시설의 복구에 나설 경우 영변 핵시설 현장에 있는 미국의 핵전문가들을 미리 혹은 곧바로 추방하기보다는 한동안 북한에 머물도록 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를 널리알리는 ‘스피커’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기만 해도 북핵 6자회담을 거부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핵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었음.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8천개 폐연료봉 가운데 지금까지 7천개 이상을 제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최근엔 대북중유지원 지연을 이유로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상당히 늦췄다”고 말함.
-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금까지 영변 핵시설의 11개 불능화 조치 가운데 8가지를 마쳤으며 폐연료봉 제거작업,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 북한은 불능화 작업 초기엔 하루 80개의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당초 6자회담에서 제공하기로 한 대북중유 100만t



상당의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폐연료봉 제거속도를 늦춰 최근엔 주당 15개의 폐연료봉만을 제거하는 등 ‘지연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는 폐연료봉 제거가 끝나야 이뤄질 수 있음.

#### ● “北위성관제지휘소 위치는 평양 룡성구역”(4/7)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평양시 룡성구역 제2자연과학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7일 “북한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제2자연과학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2자연과학원은 평양시 룡성구역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힘. 앞서 6일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평양에 있음을 시사함. 제2자연과학원과 지도상 직선거리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관제지휘소 인근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정치군사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앞으로는 룡성-순안간 2급도로가 지나고 있는 관제지휘소는 특히 뒤로 작은 산을 넘으면 엄청난 규모의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이 있음.
-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경제시설 현지지도 때는 건물 안팎의 다양한 사진들을 많게는 수십 장 발행하면서도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방문 사진은 김 위원장이 로켓 발사 관계자들과 한 건물 정면 입구에서 찍은 기념사진 한 장만 달랑 발행, 이 시설의 안팎을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지킴.
- 제2자연과학원은 로켓, 미사일과 같은 유도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1국, 상용무기(재래식 무기) 개발을 담당한 2국 등과 공학연구소를 비롯한 30여 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이중 중추인 공학연구소가 노동 1호와 대포동1호를 개발했고 이후 대포동 2호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 과학원은 1964년 6월 당시 민족보위성(현 인민무력부) 산하 국방과학원으로 출범했다가 1970년대 초 군수생산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생겨 이 위원회 산하로 들어가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백세봉)에서 독립돼 노동당 군수공업부에 직속됨.
- 북한은 이 과학원에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연구 개발하면 제2경제위원회가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 연구·개발 ▲각종 포의 자행(自行) 자동화 실현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음.
-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기지도 이 과학원 산하로 ‘농업시험소’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



한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제2자연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외에 분강 핵연구소(영변원자력연구단지)도 산하에 뒀 핵문제를 다루고 있음. 북한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방관련 분야에 ‘제2’라는 말을 붙임.

#### ● “유엔결의 후 6자회담 조기개최 추진”(4/7)

-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경한 대북 결의’를 채택시킨 후 북핵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짐. 미국의 이런 방침에 한국과 일본 등이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일 3국은 현재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결의안을 추진하는 취지가 조기에 협상국면을 복원하기 위한 것임을 집중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북한에 인식시키려 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협상’의 기회를 북한에 주기 위해 유엔 결의안 직후 6자회담과 북·미 양자협상의 조기개최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이 성사될 경우 6자회담은 다음달 중에도 개최될 수 있다”고 말함.

#### ● 안보리 ‘핵심 6개국 협의’..“진전 없어”(4/7)

-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이틀째 협의가 소득없이 끝났다고 유엔 관계자들이 전함. 한국 유엔 대표부 김봉현 차석대사는 6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영·중·러·프랑스와 일본이 참여한 핵심 6개국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서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말함.
-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께 유엔 본부에서 열려 6시30분께 끝남. 핵심 6개국은 7일 다시 협의를 갖기로 함.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회의를 마친 후 “현 시점에서 아무런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함. 또 다른 참가국 외교관은 “논의가 막혀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경고를 할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해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이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 형식이냐를 놓고 핵심 그룹 내부에서 이견이 빚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함의를 갖는 도발적 행위”라며 “유엔의 강경한 입장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첫번째이자 중요한 조치”라고 말함. 반면,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대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6자회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자동반사 대응과 같은 것에 스스로 속박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라고 말해 신



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안보리 이사국인 코스타리카의 호헤이 어비나 대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는 중국이 결의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으나 이제 그럴 수도 있다”며 “중국은 6자회담이 위협해지지 않기를 우려하고 있을뿐 약한 수준의 결의나 강력한 의장성명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함.
- 그러나 중국 유엔대표부의 류유통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결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없으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 유엔 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도 “그에 관한 어떤 정보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함.

#### ● “美MD 개편, 북한 등 위협에 초점”(4/7)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6일 미사일방어(MD) 체계 관련 예산을 축소하되, 앞으로 북한 등 ‘불량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게이츠 장관은 이날 국방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난 주말 미사일 발사는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줬다”며 “MD 부문의 개편은 불량국가와 전쟁지역의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선택과 집중전략을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 게이츠 장관은 특히 “중전에 계획했던 대로 현재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의 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불량국가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자금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미국은 핵 및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WMD) 개발로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을 주고 있는 국가들을 이른바 ‘불량 국가’로 표현해 옴.
- 이어 게이츠 장관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제2차 ‘레이저 무기 탑재 항공기’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의 항공기를 유지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탄도미사일방어(ABL) 프로그램은 예산부족과 기술상 중대한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의 작전상 역할에도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다탄두 요격체(MKV: Mutiple Kill Vehicle) 프로그램도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임. 게이츠 장관은 이 같은 MD 관련부분의 구조조정으로 미사일방어국의 예산은 14억달러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함.

#### ● “안보리 강력하고 효과적 대응필요”(4/7)

-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일치된 대응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나오길 원한다”





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고 조율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참가국들과의 논의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우드 대변인은 안보리 이사국간의 이견으로 첫 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게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이냐를 놓고 이견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북한이 취한 행동(로켓발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함. 또 우드 대변인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할 정도로 중요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전달하게 된다”고 말함.
- 우드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차원의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승리라는 지적과 관련,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로켓발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켰다는 점에서 승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 이어 그는 유엔 안보리 이외에 미-북간 양자적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다면 확실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 관심의 초점은 안보리에서 합치된 대응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우리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협상에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라면서 “그것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함.
- 그는 또 이런 종류의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복귀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이런 종류의 행위와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 “北로켓발사로 미사일기술 확산 우려”(4/6)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발전된 미사일 기술을 과시함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6일 지적함. 신문은 미국의 군과 정보 관리, 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3단계 분리는 실패했지만 2006년과 달리 이번에는 1, 2단계 추진체가 성공했다고 전함.
- 북한은 이에 따라 핵탄두 운반능력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비슷한 기술을 얻으려는 다른 국가들 사이에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고 신문은 평가함.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리는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아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성공적인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단계 추진 로켓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던 국가들로부터 구애를 받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오랫동안 북한



- 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아온 파키스탄이 북한의 이번 다단계 로켓 발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신문은 내다봄.
-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기술은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같은 국가로부터 관심을 끌 만하다고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이 밝힘.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장을 지낸 헨리 오버링 예비역 중장도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을 국제사회에 선전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 라이스 美대사 “美, 강력한 대북제재안 원해”(4/6)

- 미국은 유엔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6일 밝힘. 라이스 대사는 이날 미 CNN,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도 이 같은 행동을 벌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 이를 위해 미국은 앞으로 안보리의 주요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라이스 대사는 덧붙임. 라이스 대사는 “북한을 6자 회담이라는 건설적인 협의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적 노력과 압력을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논의의 목표는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함.

#### ● 이란, 北로켓발사 옹호..對北협력설 부인(4/6)

- 이란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모든 나라는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며 북의 로켓 발사 행위를 옹호했다고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6일 전함. 하산 카시카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를 개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우리가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듯이 다른 나라 역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 카시카비 대변인은 이번 로켓 발사를 위해 북한과 이란이 긴밀히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함. 그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를 뿐 더러 독립적이라고 강조함.
- 산케이신문은 북의 로켓 발사에 앞서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1일부터 이란 대표단 15명이 북한에서 로켓 발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음. 이들은 이란의 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터스트리얼 그룹(SHIG) 간부들로, 이 회사 기술진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의 발사 때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신문은



전함.

- 이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이란 간 미사일 및 로켓 협력 의혹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는 북한의 발전한 군사능력은 물론 이란과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북한과 이란은 각기 10년 이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나란히 개발해 왔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를 오도하고, 강경한 제재를 회피하는 등의 전략을 서로 학습해 왔다”고 주장함.
- 이란은 지난 2월 2일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인공위성을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함. 이란은 2005년 10월 러시아 로켓에 실어 인공위성 시나-1호를 발사한 적이 있지만 자체 개발한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것은 당사가 처음이었음. 황의돈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도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 “탄두 크기로 볼 때 이란이 최근 발사한 위성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향후 중동 국가에 미사일 기술의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과 이란의 위성발사용 로켓 제작 기술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 英, 北에 6자회담 재개 촉구 방침(4/6)

- 영국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미사일 관련 추가활동 중단과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빌 라멜 영국 외무부장관이 6일 밝힘. 라멜 부장관은 이날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추가 활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그들(북한)이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미 있고 검증될 만한 준비를 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혜택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 “北위성 궤도 진입 실패”<러 관리>(4/6)

- 북한이 5일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6일 러시아 민영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이 관계자는 “우리의 우주 감시 시스템이 북한 위성의 우주 궤도 진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위성은 거기(궤도)에 없다”고 말함. 이 발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주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러시아가 미국, 한국 정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 미군 북부사령부(USNORTHCOM)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



명에서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앞서 북한은 5일 오전 11시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함.

-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이번 행위가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이번 상황은 군사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되는 일로 러시아는 전문가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전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1718호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로 봐야 한다면서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 ● <北로켓발사> “은하2 후속판은 中 장정1호를 보라”(4/6)

- 북한이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2를 개량할 경우 그 성능은 중국의 장정1호 로켓을 모델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우주 무기 전문가가 주장함. ‘걱정하는 과학자모임(UCS)’의 지구안보 프로그램 공동국장인 데이비드 라이트씨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인 지난 2일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위성 발사체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은하2가 대륙간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려면 발사체의 자재와 사용연료 등에서 “상당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함. 그는 은하2의 제1,2,3단계 로켓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은하2는 전체 무게가 약 80t에 이르고 약 100kg의 탑재물을 지상 400km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 로켓을 탄도미사일로 사용할 경우는 500kg의 탄두를 약 9천km, 1t 짜리 탄두는 약 6천km 운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북한이 500kg 무게의 (핵)탄두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필요한) 열차폐막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은하2는 (아직) 진정한 대륙간 핵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는 말함. 이란이 지난 2월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린 사피르 2호 로켓도 “1t짜리 탑재물을 실을 경우 사정이 약 4천km여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정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 그는 북한이 은하2를 탄도미사일로 사용하려면 로켓 동체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발사체의 구조질량을 줄이고 엔진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북한이 은하2의 다음 버전 개발 때 장정1을 모델로 할 가능성에 주목함.
- 1970년대 첫 발사된 장정 1호의 제1단계 로켓은 애초 동평 3호 탄도미사일용으로 설계된 엔진을 4개 결합한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북



한의 은하 2호와 같은 크기와 구조이나, 알루미늄 합금 동체에 더 강한 추진력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300kg을 수백km 상공의 궤도에 올릴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로 발사될 경우 1t을 8500km, 500kg을 1만2천km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라이트 국장은 은하2의 제1단계 로켓은 직경 2.25m로, 노동 미사일에 사용된 직경 1.25m짜리 엔진과 유사한 엔진 4개를 결합해 만들어 노동 미사일에 비해 4배의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제2단계 로켓은 노동 엔진 1기나 유사한 능력의 엔진 1기를 고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조했을 것으로 봄.

#### ● <北로켓발사> ‘對美 협상압박용’ 분명히 드러내(4/6)

-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보인 움직임은 이 로켓 발사의 목적이 미국에 ‘미사일 위협’을 부각시켜 협상을 통해 정치·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의도임을 드러냄. 북한은 5일 ‘광명성 2호’의 발사에 앞서 발사 시점 등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래 장거리 로켓의 수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을 외교정책의 최대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미국을 끊임없이 자극해 옴.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외화를 위해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며 “만일 미국이 보상해 준다면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단될 것”이라고 제안함. 그는 또 2000년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 만났을 때는 “로켓 연구해서 몇 억달러씩 나오는데 그거 안할 수 있느냐”며 “시리아와 이란에 로켓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과 탑재된 위성의 개발비로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5천500억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돼 북한이 이 돈을 자신들의 ‘경제살리기’에 사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무성하지만,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선 이번 로켓 발사는 대형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인 셈임.
- 그는 1999년 로켓 발사에 수 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면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고 내일의 부강조국을 위해 자금을 그 부문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미사일 투자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자’라는 주장을 폈음. 이번 광명성 2호의 발사를 모니터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다계단 운반로켓도, 인공지구위성도 100%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여 단 한번의 발사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자랑찬 위력의 과시”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함.
- 다음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및 “인공위성” 개발과 수출, 시험발사 등에 관해 공개 언급한 내용임.



- ▲ “다계단 운반로켓도, 인공지구위성도 100% 우리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여 단 한번의 발사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자랑찬 위력의 과시이다. 광명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토대하여 우주공간의 정복과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2009년 4월5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광명성 2호’ 발사를 관찰한 뒤)
- ▲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이 된다면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갖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미사일은 다 폐기하겠다.”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가진 6.17면담에서)
- ▲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2001년 5월 방북한 유럽연합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 ▲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은 교역의 일부다. 미사일을 사려는 사람을 찾게 되면 그에게 미사일을 팔 것이다. 내가 한 약속은 지키겠지만 교역을 포기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음)
- ▲ “이것이 첫번째 위성발사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2000년 10월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함께 집단체조를 관람하다가 대포동 미사일 형상이 연출되자)
- ▲ “외화를 위해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보상해 준다면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 의도가 외화 때문만은 아니고 자위의 일부분으로 군을 무장시킨다. 만일 남한이 500km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만 한다면 우리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가 북한을 대신해 통신위성을 띄워주는 데 동의한다면 북한에는 미사일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 ▲ “로켓 한 발에 2억~3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 위성을 대신 쏘주면 우리가 개발을 안하겠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말했다. 로켓 연구해서 몇억달러씩 나오는데 그거 안할 수 있다. 시리아와 이란에 로켓을 판매하고 있다.” (2000년 8월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 면담에서)
- ▲ “외국의 로켓추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직 평화적인 우주개발 연구에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 ▲ “적들은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만 몇억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다. 나는 우리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고 내일의 부강조국을 위해 자금을 그 부문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다.” (1999년 당·정간부들에게 한 발언 중에서)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인공지구위성을 단 한발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 정책의 빛나는 승리다.” (1998년 9월 광명성 1호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보낸 감사문에서)

#### ● 안보리 첫 회의 결론못내..“논의계속”(4/6)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첫 날 협의가 서방 세계와 중국·러시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됨. 안보리는 향후 비공개 전체회의 및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이지만, 양측 간 견해차가 커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도 헬러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이사국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북한의 책임에 상응하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조치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15개 이사국이 모두 각국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대북 비판과 관련한 의장의 언론 회견 문구를 놓고 일부 격론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도높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로 봐야 한다면서,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들의 입장에 동조한 안보리 이사국은 리비아, 베트남, 우간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외교관은 회의를 마친 후 로이터 통신 기자에게 “회의장 분위기는 10 대 5로 갈렸다”고 전했다. 미·일 등의 주장에 동조한 국가가 10개국이고 반대 국가가 5개 국가라는 의미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와 “우리는 매우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안보리 대응에 관해, 우리(중국)의 입장은 신중하고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 회의에서는 또 의장의 대언론 회견문구와 관련해 ‘우려(Concern)’라는 표현을 쓸지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등 10개 이사국들은 의장이 회견에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러 등 5개국이 이를 반대해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임.

#### ● 日, 北 로켓 낙하물 회수 검토(4/6)

-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낙하물 회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전함. 일본 정부는 특히 로켓 엔진을 회수하게 되면 노즐 구조 및 연료 종류 등을 근거로



북한의 로켓 기술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현재 일본 정부는 1단계 추진체가 떨어진 곳을 아키타(秋田)현에서 서쪽으로 280km 떨어진 동해상의 수심 1천520m 지점인 것으로 보고 있음. 또 2단계 추진체는 일본 동쪽 태평양 공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방위성은 5일 아키타현 서쪽 300km 동해상의 해수면이 변색돼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음.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또는 공해상에 낙하물이 있을 경우 국제법상 이를 탐색하는데 문제는 없음. 해저 탐색에 성공한 예는 지난 1999년 일본의 발사 실험 실패로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의 지치지마(父島) 북서부 380km 지점 해상에 추락한 H2로켓 8호기의 1단 엔진이 있다. 당시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는 무인탐사기를 잠수시켜 수심 3천m 해저에서 이를 발견함.

#### ● “北, 로켓 발사전 미·중·러에 통보”(4/6)

- 북한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발사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6일 알려짐.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최종흡 국가정보원 제3차장(대북 담당)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함.
- 한 참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한 날(5일) 사전에 그 사실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북한이 미·중·러 3개국에 알린 내용은 “대략 몇시 이후 발사하겠다”는 것으로, IMO(국제해사기구)에 통고한 발사시점(4월4~8일) 보다 더욱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이 의원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발사시점에 대해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미국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국정원은 또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 “로켓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짐. 다른 참석 의원은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붙어야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며 “궤도에 진입하면 신호가 잡혀야 하는데 그 신호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함.

#### ● 北유엔대사, 로켓발사 “성공적, 축하해야”(4/6)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5일(현지시간) 로켓 발사와 관련해 “성공적이며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말함. MBC가 보도한 방송화면에 따르면, 신 대사는 이날 출근 도중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로부터 로켓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행복하다. 매우 매우 성공적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하해야 한다”고 짧게 답함. 신 대사는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





은 채 유엔 북한대표부 안으로 들어감.

-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미국과 일본 등이 제재 논의를 위해 요청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이날 열렸으나 유엔 북한대표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 ● <北로켓발사> “北-이란 미사일 커넥션 부각”(4/6)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5일 북한의 로켓발사는 북한의 발전한 군사능력은 물론 이란과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함.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7월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를 도왔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과 이란은 각기 10년 이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나란히 개발해 왔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를 오도하고, 강경한 제재를 회피하는 등의 전략을 서로 학습해 왔다”고 지적함.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동업자 관계’가 던져주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확산을 이뤄내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켜낸다는 미국의 입장은 비단 북한뿐아니라 이란을 포함해 확산우려가 있는 국가에도 전 달돼야 한다”고 요구함.
-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과 핵개발은 태평양 지역에 주둔중인 미군은 물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거주하는 미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함.

#### ● <北로켓발사> 미-러 외무 “6자회담 계속돼야”(4/6)

-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 정부는 이번 로켓발사와 상관없이 북핵 6자회담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가 보도함.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로켓발사 후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6자회담 등을 포함해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힘.
- 성명은 양국 장관이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6자회담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긴밀히 접촉하면서 북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미국과 일본은 이번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있어 관련국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면서도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은 상태임.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은 군사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되는 일로 러시아는 전문가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함.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외교위원장은 “유엔 안보리는 군사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결정이나 제재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할 때 유엔 안보리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함.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8일 러시아가 북한이 위성 발사한다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6자회담 대원칙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바라는 한·미·일 등 다른 회원국들과 호흡을 맞추느냐 아니면 북한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고려해 한걸음 비켜서있는 것이 나은지를 두고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임.

#### 나. 미·북 관계

##### ● 브라운백 “北 테러국 재지정 입법추진”(4/7)

- 샘 브라운백 미국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6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미 의회내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휴회중인) 상원이 재소집되면 6자회담 과정에서 풀렸던 제재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함.
- 브라운백 의원은 또 법안에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함. 브라운백 의원은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해 줬더니 북한은 미국 서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은 물론, 두 명의 미국 시민(억류중인 여기자 2명)을 납치하고, 핵확산과 미사일 기술이전을 했다”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 같은 위협에 맞서고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책적 협력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함.
- 앞서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5일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다. 중·북 관계

##### ● 中후진타오, 北김정일에 “북중관계 강화” 축전(4/1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후 주석은 축전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다시 추대된 것은 조선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지지와 높은 신뢰의 표시”라고 축하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후 주석은 이어 “중·조(북)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며 “중국측은 중·조 외교관계 설정 60돌과 중·조 ‘친선의 해’를 계기로 중·조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측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후 주석의 이번 축전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이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간 ‘선린우호협조 관계의 강화’를 강조해 주목됨. 중국은 안보리 논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평화적 우주이용 목적’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제재결의에 반대해 결의보다 낮은 수준의 의장성명 채택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라. 기타

##### ● “北장성택, 지난달 유럽 3국 극비 방문”(4/12)

- 국방위원에 오름으로써 북한 권부의 ‘2인자’임을 재확인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지난달 초.중순에 걸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 나라를 비밀리에 순방한 것으로 확인됐음. 북수의 대북 소식통은 12일 “장 부장이 3월초부터 중순 사이에 프랑스 등 3개국을 극비리에 다녀왔다”며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방문기간과 방문국을 볼 때 최근 이탈리아에서 사건이 불거진 김 위원장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을 위한 거래, 지난해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던 김 위원장을 치료한 프랑스 의료진 면담 등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 장 부장은 올해 1분기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 등을 19번이나 수행할 정도로 김 위원장을 밀착보좌하고 있으나, 2월 25일 김 위원장의 함경북도 회령 현지도 보도 이후 3월 20일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현지도 보도 때 다시 수행원으로 거명될 때까지 20여일간 북한의 언론보도에서 사라졌었던 점에 비춰 이 기간에 유럽을 다녀온 것으로 보임.
- 그는 특히 이탈리아 방문기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 부부를 만났을 때 함께 타고 대동강과 평양을 둘러봤던 요트가 낡아 이번에 최고급 호화요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은행 계좌를 통해 이탈리아의 요트 구입 중개업자에게 송금했지만 이



러한 돈 흐름이 유럽의 금융당국에 추적당해 돈만 날린 채 요트는 구입하지 못했음.

-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유엔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을 위한 물품거래가 외국 정보기관에 별로 들키지 않고 진행되자 긴장이 느슨해지는 바람에 현금 거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은행거래를 했다가 걸린 것”이라고 풀이했음.
- 일본의 지지통신은 지난 5일 “유럽 금융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 대금의 일부인 수백만달러를 압수했다”며 유럽 금융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유럽 주재 북한 당국자가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탈리아 이지무트사의 호화요트 2척으로, 전체 대금은 2천만달러(약 28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 ● 러 “北이 쏜 것과 같은 미사일 격추가능”(4/10)

- 바딤 볼코비츠키 러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9일 러시아군은 북한이 발사한 것과 같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볼코비츠키 총장은 “극동지역의 (러시아) 공군은 북한이 쏜 것과 같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러시아 공군의 핵심 전력인 S-300 방공 미사일 로켓 시스템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격추할 수 있음. 볼코비츠키 총장은 또 러시아군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모니터했다고 밝혔으나 발사 목적에 대한 평가는 피함.
- 한편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그는 “더 엄한 제재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6자회담에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더 분노하게 할 것이며 이는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조함.

#### ● 英총리 “대북 군사대응 검토 안 해”(4/10)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9일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운 총리는 알 자지라 영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북한은 완전히 고립돼 있으며 이러한 핵기술을 보유하기까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말함.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켓 발사에 대응해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브라운 총리는 또 “방어와 민간 핵개발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나라들의 열망을 충족시킬만한 새로운 핵 비확산 조약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 안에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베트남 “北 식량생산 돕겠다”(4/9)

- 베트남은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9일 밝혔다. 르 등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정기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광업과 식량 생산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이 자국을 방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간 이어진 흉작으로 총 주민의 40%인 870만 명이 몇 달 안에 식량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할 전망이다.

### ● “북한이 헤즈볼라 로켓공격 도왔다” 美서 손해소(4/9)

- 북한의 로켓 발사로 중동지역 등의 테러집단에 대한 미사일 확산이 국제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헤즈볼라의 로켓공격을 도왔으며,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을 상대로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8일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됨.
-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30명은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2006년 7월과 8월 이스라엘 북부지역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함.
- 연합뉴스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또 당시 북한은 헤즈볼라의 지하터널망 구축을 도와 이들이 이스라엘 도시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테러방지법과 외국주권면제법을 근거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헤즈볼라 소속 모하메드 프네이쉬 레바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시 헤즈볼라 로켓 공격의 부상자들인 이들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06년 발사된 헤즈볼라 미사일의 핵심 부품이 북한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정보를 들었음. 이들은 당시 헤즈볼라가 수천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 최소 43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희생됐고 4천262명이 부상했으며, 14억달러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산됨.
- 이 소송 제기로 인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또 만약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헤즈볼라에 북한이 무기 등 지원을 제공했다고 법원이 판단,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음.
- 미국은 북한을 작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북한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이 된 이후 13년여 동안 주목



할만한 테러 지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원고들은 소장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발표를 할 때도 북한이 헤즈볼라 장교를 상대로 한 게릴라전 훈련에 관여하는 등 2007년 12월 이전에 북한이 해온 국제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해 정보당국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함.

-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미국, 일본 등 일부 정보 관계자나 정치인 등은 북한이 헤즈볼라나 스리랑카의 타밀 엘람해방호랑이 반군 등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옴.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 주장을 정면 반박하지는 않으면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냄.

#### ● EU집행위 “北 고려항공, 계속 취항금지”(4/8)

-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유럽연합(EU) 취항금지 조치가 다시 연장됨. 고려항공은 8일 EU 집행위원회가 수정, 발표한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에서 제외되지 못해 지난 2006년 3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계속 이름을 올림.
- EU 집행위는 산하 항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차례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를 수정, 발표함. EU 집행위 관계자는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전적으로 항공안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뿐 그 이오에 정치적, 외교적 이슈 등은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한편, EU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블랙리스트’에는 ATMA 항공 등 6개 카자흐스탄항공사와 원투고 항공(태국), 모토르시크 항공(우크라이나),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등록된 모든 베냉공화국 항공사가 새롭게 등재됨. 수정·발표된 EU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는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집행위는 설명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李국방 “한미동맹 전통 신뢰관계 회복”(4/11)

-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이제 전통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했다”며 “올해부터는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 장관은 최근 ‘국방을 회고하다’란 주제로 서울대 홍두승 교수와 가진 대담에서 한미군사동맹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고 국방부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이 장관은 “작년 4월 한미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제, “우리의 숙원이던 한국의 FMS(대외군사판매) 구매국 지위향상과 전쟁비축탄인 WRSA-K 양도문제 등을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자평했음.

- 그는 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합의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우리가 완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전력 지속 제공을 합의할 수 있었고 유사시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인 강력한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지원보장도 끌어냈다”고 했음.
- 최근 논란이 있었던 군내 ‘불온도서’ 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이 장관은 “현행법상 이적단체가 장병 의식화를 목적으로 군내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한 대응차원의 조치”라며 “그들은 장병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반정부, 반미감정을 유발하고 우리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인 북한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도 헌법상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지만 군이 수행하는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부 기본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음.

#### ● 美, 韓·일에 핵우산 제공 입장 재확인(4/8)

-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억지력 제공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이 7일 밝혔. 맥도너 부보좌관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5일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 도중 “우리는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핵)억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
- 맥도너 부보좌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확장된 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전략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확장된 억지력’이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에 대해 제 3국이 핵공격을 가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이 이들 국가에 즉각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임.
- 맥도너 부보좌관은 그러나 아키바 타다토시(秋葉忠利) 히로시마 시장이 지난 6일 핵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릴 수 있도록 미국 측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행한 체코 연설 도중 앞으로 1년 안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상회담을 주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아키바 시장은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함.



## 나. 한·중 관계

### ● 한·중, 무역규모 지난해 수준 유지키로(4/11)

- 한국과 중국은 11일 올해 무역 거래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음. ‘아세안+3’ 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파타야에서 면담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최근 중국의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높게 평가한 뒤 “중국 경제의 회복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도 한국과 중국 간 무역 거래량을 2008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지난해 후쿠오카 3국 정상회에서의 원자바오 총리 제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의 지식경제부(중국은 상무부) 장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원칙을 확인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음.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과 더욱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 협력을 가속화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을 감독하는 데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뒤 “양국 간 무역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상무장관 간 접촉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등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음.

### ● 中외교관리 “北로켓 파타야회담 의제 안될듯”(4/8)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가 오는 12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8일 전망함.
- 후 부장조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성 문제는 너무 한정적인 문제”라며 “그 문제가 3국(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그러나 후 부장조리는 참가국 중 어느 두 나라 사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가 오르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음.
- 한·중·일 정상회담은 오는 11일부터 파타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과정에서 이뤄질 예정임. 중국은 그동안 북한도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비난을 거부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북핵 6자회담의 재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옴.





### ● **李대통령 “北로켓문제 해결 中역할 커”(4/6)**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리창춘(李長春)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으며, 이에 리 상무위원도 공감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특히 리 상무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 이어 이 대통령과 리 상무위원은 지난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올해 고위급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의 내실을 다져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 또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대해 긍정 평가한 뒤 양국이 향후 거시경제 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함. 이밖에 이 대통령과 리 상무위원은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언론 매체 및 학계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키로 했으며, 양국 의회와 정당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하자는 데 공감함.
-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리 상무위원 방한은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북한 로켓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등의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이날 접견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말함.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방한 중인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사단을 접견하고 광주 유치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전달함.

### 다. 한·일 관계

#### ● **김현희, 日 다구치 가족에 안부편지(4/12)**

-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던 김현희(47)씨가 지난달 부산에서 면담을 가진 일본인 납북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中八重子)씨 가족 앞으로 안부 편지를 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음.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으로 전달된 이 편지에서 김씨는 지난달 11일 부산에서 다구치의 오빠와 아들과 만난 것에 대해 “생애에서 잊어 버릴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다시 만나 못다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기를 기원했음. 김씨는 다구치씨 가족들이 면담시 선물로 준 일본 가요 CD를 집에서 들으면서 평양에서의 공작원 교육 당시 일본어 교사였던 다구치씨가 노래를 들려주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한다고 적었음. 김씨가 다구치씨 가족 앞으로 산케이에 편지를 전달한 것은 면담 전을 포함해 두번째로, 산케이는 이 날짜 신문에 기사와 함께 편지 전문을 소개했음.
- 산케이에 따르면 김씨는 다구치의 오빠이자 납치피해자가족회 회장



인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0)씨로 부터 일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본인도 일본 방문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김씨의 일본 방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내 유족들의 감정을 고려한 한국 정부의 허가 여부와는 별개로 일본에서도 법적 문제와 신변의 안전 등 풀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경우 민간여행객이 폭파사건의 실행범으로 사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입국관리법상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 이 때문에 김씨의 방일이 실현되려면 일본 정부의 특별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함.

#### ● “日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철회해야”(4/9)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자유사(自由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심사에서 합격시킨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함. 역사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4개 역사·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자유사판 교과서는 후소사(扶桑社)판 교과서에 이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전쟁을 찬미한 또 하나의 위험한 교과서”라며 이같이 요구함.
- 이들은 “20세기의 낡은 유산인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노력하는 이때 이번 결정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식민지배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함. 또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자유사판 교과서 검정을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화해라는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을 묵인하지 말고 역사왜곡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자유사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일본 정부의 자국 중심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이 또 부활하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함. 교총은 “일본 교원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의 편협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고발하고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라. 미·중 관계

##### ● 中, 美 총기난사 사건에 공식대응(4/6)

-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국인 4명이 숨진 데 대해 미국 정부에 “중국인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공식적으로 대응함.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5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전화통



화에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중국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양 부장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이 밝힌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양 부장은 “중국인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부상자 치료와 장례절차 등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함. 그는 “미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임.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요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중국인들에게 치료와 사후 조치를 제공하고 유가족들의 미국 방문과 장례 절차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현재 주미 중국 대사관과 주뉴욕 총영사관은 현장에 직원을 급파하고 미국 당국과 사건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지난 3일 미국 뉴욕주 병엄턴 이민서비스센터에서는 베트남 출신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중국인 4명과 아이티,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인 등 14명이 사망하고 30대 한인 여성 1명과 중국인 1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부상함.

#### 마. 미·러 관계

##### ● “미-러 START 협상 오래 걸릴 수도”(4/8)

-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오는 12월 시효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1)을 대신할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의 입에서 나와 주목됨. 로즈 고테필러 미국 국무부 검증·군축 차관보는 7일 “가능한 한 최선의 타협을 이루도록 하겠지만, 이번 협상이 (시한인) 올해 말을 넘겨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함.
- 고테필러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성과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힘. 러시아 군사 전문가로 빌 클린턴 전 정부에서 핵확산 방지담당 에너지부 차관보를 지낸 그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끝인 지점으로 무작정 달려갈 수는 없다”며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적절히 호흡을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침. 이날 포럼에 함께 한 세르게이 키슬라크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도 미 행정부의 핵무기 폐기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면서도 “협상 결과를 보기까지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런던에서 만나 1994년 발효된 START-1을 대체할 협정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즉각 실무 차원의 협상에 착수,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이 예정된 오는 7월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2월5일 협정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정을 내 놓기로 함.

## 바. 기타

### ● **李대통령, 일정 하루앞당겨 조기귀국(4/11)**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로 촉발된 태국 정국이 혼미를 거듭함에 따라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오후 조기 귀국길에 올랐음. 또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전면 연기됐으며, 각국 정상들은 이날 중 전원 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는 “태국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가 비상상황을 선포했고, 각국 정상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면서 “조기 귀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한중 정상 면담,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음.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에 강력한 목소리를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음.
-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3국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에 단합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과 문안은 유엔 안보리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편 아피싯 총리는 우타파오 국제공항에 미리 나와 있다가 조기 출국하는 이 대통령에게 “머무시는 동안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음.

### ● **아세안, 亞공동기금 증액 관련 분담 비율 확정(4/10)**

- 아시아 공동펀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 규모가 기존의 800억달러에서 1천200억달러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아세안 국가들이 9일 늘어난 기금의 출연 비율을 확정함.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콘 차티카와닛 재무장관은 오는 11~12일 열릴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앞두고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각국별 기금 출연 비율을 확



정해 기쁘다”면서 합의 내용을 밝힘. 콘 장관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은 각각 47억6천만 달러를 출연하며, 필리핀은 36억8천만 달러를 부담하게 됨. 또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은 각각 자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해 기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콘 장관은 덧붙임.

- 앞서 ‘아세안+3’ 국가들은 지난 2월 열린 재무장관 회담에서 CMI 기금 규모를 1천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부담 비율은 CMI 창설 당시와 같은 한·중·일 80%, 아세안 20%의 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었음. ‘CMI’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로, 역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콘 장관은 역내 금융 안정성 강화야말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회원국들은 앞으로 역내 금융 협력을 더 강화해 아세안을 오는 2015년까지 유럽연합(EU)과 같은 성격의 공동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참고 1] 북한 헌법 개정사(4/10, 연합뉴스)

연 도	제 개정	비 고
1948.9.8	제헌 (10장 104조)	-48.8.25 총선거(572명 대의원선출) -48.9.2 최고인민회의 제1기1차회의 개막
'54.4.23	1차 개정	-지방행정구역중 면 폐지, 읍과 노동자구 신설
'54.10.30	2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 3년→5년 연장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 인민위원회로 분리
'55.3.11	3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한 일부 수정
'56.11.7	4차 개정	-선거권·피선거권 20세→18세
'62.10.18	5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출 기준 3만 명당 1인으로
'72.12.27	사회주의헌법 제정 (11장 149조)	-최고인민회의 제5기1차 회의 -노동당 우월지위 명시 -주체사상의 헌법 명시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92.4.9	1차 대폭 개정 (7장 171조)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통제 강화 -마르크스.레닌주의 후퇴 및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98.9.5	2차 대폭 개정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한 강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상임위원회로 격상 개칭
2009.4.9	3차 개정	미공개(국방위 관련 추측)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9/0511000000AKR20090409235200014.HTML>



### [참고 2] 역대 김정일 체제 출범 비교(4/1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김정일 3기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11년만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으나 개정 내용 공개는 미뤘다.

구 분	10기(김정일1기)	11기(김정일2기)	12기(김정일3기)
대의원선거/ 1차 회의일	'98.7.26/'98.9.5	'03.8.3/'03.9.3	'09.3.8/'09.4.9
참석자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일 등 680명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일 등 670명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일 등 663명
주요의안	사회주의 헌법수정·보충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정일 위원장 추대)	김 위원장 재추대	김 위원장 재추대,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미공개)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일철, 리용무 위원: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총 10명)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연형묵, 리용무 위원: 김영춘, 김일철, 최용수, 전병호, 백세봉 (총 9명)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위원: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장성택,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총 13명)

sungjin@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9/0511000000AKR20090409233600014.HTML>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